



### 열린 바닷길 몰린 관광객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찾은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26일 오후 6시경 바닷길이 열리자 무리를 지어 건너고 있다. ‘신비의 바닷길’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로 갈라지면서 길이 2.8km, 폭 40여m의 사구(모래언덕)가 생겨나는 현상으로 국가지정 명승지 제9호로 지정돼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spark@

### ■ ‘판죽 정부’에 짝막한 지역현안

F1지원법 제정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5+2광역경제권 재정,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 등 광주·전남의 운명을 좌우할 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광역경제권 문제와 엑스포의 경우 정부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지원과 대처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F1

지원법과 J프로젝트는 정부 당국의 반대기류에 부딪혀 사업 추진동력이 꺼져 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투자자까지 결정된 이들 현안사업이 표류할 경우 지역발전이 결실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

### F1지원법 촉구 서명운동 동참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가 ‘F1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광역 시·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대표단이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적인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F1지원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개 광역 시·도 공무원노조 대표 60여 명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단순한 지역축제 아닌 국가적 행사”라고 강조하고 “F1지원법 제정과 예산지원을 비롯 국가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국 공무원 노조 대표단은 2010 F1대회 지지 서명을 하고,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갖기로 해 F1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는 관광 및 자동차산업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데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가졌다”며 “앞으로 전국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2010 F1대회 성공개최 및 F1지원법 조기제정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

## 민자유치 무산 ‘선장’ 없이 표류

###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도 경기 침체로 악재가 겹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아무아리움을 비롯한 주요 민자유치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된데 이어 박람회를 진두지휘해야 할 조직위원장마저 한 달째 공석상태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아무아리움과 콘도, 유휴지 등 주요 민자유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35%를 민간 투자로 조달하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박람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약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사의를 표시한 장승우 조직위원장의 후임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가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 3년여 남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후임 조직위원장 인선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민들은 민자유치 저자로 박람회 성공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박람회 개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후임 조직위원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문화관광부 견제로 2년째 제동

### F1지원법

오는 2010년 10월 영남에서 개최될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선 F1지원법 제정이 필수다. F1지원법은 정부가 F1대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F1지원법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하고 끈질긴 견제에 걸려 2년째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통해 ‘F1대회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2010년 F1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년째 F1지원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주 국회 국제경기특위법안심사소위에 보낸 정부 의견서를 통해 F1지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부는 또 최근엔 전남도의 반발을 의식해 ‘지원법은 제정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예산을 지원할 기획재정부는 ‘지원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정부가 어떤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라도 오는 2010년 10월 영남에서 F1대회가 열리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부 지원이 무산되더라도 전남도 독자적으로 F1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농식품부, 부지내 ‘알박기’ 강행

### J 프로젝트

전남도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계획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J프로젝트 개발지구 6곳 중 한 곳인 송천지구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규모 농어업회사 유치를 가시화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J프로젝트 개발지구 내 송천지구인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3단계 2-1공구 간척지에 수출주도형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꾸려갈 사업을 강행했고, 지난 5일 결국 우선 협상자로 4개 법인을 선정하면서 J프로젝트 성공에 ‘천물’을 끼얹었다.

농어업 회사가 들어설 산이면 간척지는 수년 전부터 전남도가 J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정치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송천지구로, 최근 5천만 달러 외자유치가 성사단계이다.

송천지구(15.4km)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출농업법인 설립 예정 간척지와 일부가 겹치는 곳으로, 지난해 미국 트러스(TRUSS)그룹 등과 총 45억 달러 투자협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식품부에 농어업회사 설립 지역을 인근 마산지구 간척지로 옮겨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농식품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 영·호남간 산업격차 심화 우려

### 5+3 광역경제권 무산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지역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지역 정치권은 호남에 ‘호남권’(광주시,전남도, 전북도) 1개 권역을 둔 반면, 영남에 대경권·동남권 2개 권역을 설정 한데 대해 ‘영·호남 산업 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재조정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권역설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남도 등은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약속한 광주 R&D특구 지정, 클린 디젤자동차

차 산업단지조성,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망 건설 등 대형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통해 권역간 불평등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압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역철도망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현안이 없는 등 ‘백지수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